

제4차 UCOK 학술회의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간부문 역할

- 일시 : 2021. 11. 4.(목) 13:30
- 장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 주최 : (사)한국통일협회

제4차 UCOK 학술회의

<프로그램>

시간	내용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식 ※진행 : 김영도 사무총장
13:30-13:40	개회인사 : 정세현 한국통일협회 회장
13:40-14:00	키노트스피치 : 김형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14:00-15:10	제1세션(민간부문 역할 및 평화담론 형성)
	사회 : 이덕행 고려대 특임교수
	발제 : 양창석 선양하나재단 한국대표
	토론 : 송광석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
	김중태 남북물류포럼 부회장
	김충환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
	이강우 남북사회통합연구원 남북경협센터장
15:20-16:30	제2세션(뉴노멀세대의 역할 및 평화담론 형성, 토크콘서트)
	사회 : 김형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토론 :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이창열 AP글로벌컨설팅 중국센터장
	지창근 하나를위한음악재단 사무국장
16:40-17:50	제3세션(대주제 라운드테이블)
	사회 : 이덕행 고려대 특임교수
	토론 : 김중태 남북물류포럼 부회장
	김충환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
	김수일 통일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
	이강우 남북사회통합연구원 남북경협센터장

목 차

키노트 스피치

■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간부문 역할 5

- 김형석(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한국통일외교협회 회장)

발 제

■ 민간부문 역할 및 평화담론 형성 10

- 양창석(선양하나재단 한국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초빙교수)

토크콘서트

■ 뉴노멀세대의 역할 및 평화담론 형성 24

- 참고 자료(발췌) :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의 특징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간부문 역할

김형석(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한국통일협회 상근부회장 김형석입니다.

풍요와 청풍명월의 계절에 한국통일협회가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개최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반도정세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강한 집착과 이를 포기하도록 하는 우리 및 국제사회의 입장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푸르른 가을하늘과는 달리 가슴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의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사회 내부에서는 2018년 세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 회담 등에도 불구하고 2019년2월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일탈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문제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발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 해결을 회피하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슬기롭게 제거해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와 장래가 보장된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사항)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함께 해 온 남북한이 대결과 갈등, 전쟁을 치루고 헤어나기 어려운 분단구조에 빠지게 된 것은 시대적 흐름에 대한 통찰력과 우리민족 내부의 소통과 협력의 부족에서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5년8월 일본의 패망과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세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민족의 염원과 달리 한반도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되었습니다.

당시 우리선조들의 국제사회 흐름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단일국가 형성을 위한 단합된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반도문제를 단순화하면 북한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일 중 러와의 국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한반도문제의 대부분은 북한 행태에 의해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한반도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북한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는 ‘내재적 접근’과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보는 ‘외재적 접근’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북한 행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분석이 우선 되어지면서 북한 의도와 통제 가능 요인에 대한 정밀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 ‘감정과 이성’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일탈적 행태를 보다보면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카타르시스적인 대응책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적인 일탈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이성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문제에 있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제사회가 가지는 이해관계는 제한적입니다.

핵무기국제비확산체제(NPT) 유지,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 확보, 경제적 이득 등이 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들 국가와는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문제 해결 여부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기에 우리는 한반도문제에 있어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민간부문의 역할)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긴장, 불안과 전쟁 우려를 걷어내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성장 발전하여 세계무대에 우뚝 설 수 있어야 합니다.

70여년의 분단기간 이승만정부부터 지금의 문재인정부까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공동 번영,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날의 남북관계 현실은 여전히 갈등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남북한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호체제 존중과 다양한 분야의 소통과 교류협력, 그리고 이를 통해 70여년동안 쌓인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사라지는 상태인 ‘평화공동체’를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위해 당면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의 정책적 수단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면서 북한 스스로가 핵을 내려 놓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념적으로나 안보적 측면에서 얼굴을 붉히더라도 민간차원에서 가능한 분야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남북관계 긴장이 관리되고 상호이익의 방향으로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사실상 자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를 위해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 사례처럼 정부는 재정지원과 민간단체 활동의 큰 틀만 제시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정부가 사후 평가를 통해 조율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만합니다.

아울러 공직에서의 통일경험을 가진 인사들과 민간 남북교류협력 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통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축적한 대북 협상과 남북교류 경험이 퇴직과 함께 사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북협상과 남북교류협력 등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민간단체에게 전수해 주고 민간단체 남북교류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직 이후에도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의 통일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대북협상아카데미와 남북통합인재육성 아카데미, 그리고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의 분단과 평화의 상징지역을 견학하면서 통일정책을 직접 수행했던 인사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주제가 있는 평화 투어’, 그리고 통일부 퇴직 공무원과 민간단체와의 ‘2인 3각 협력 플랫폼’ 구축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맺음말)

지난 70여년간의 남북한 분단사에 있어 갈등과 긴장, 대화와 협력의 과정은 수차례 반복되어왔고 지금의 상황도 과거와 같은 연장선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해결보다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통해 우리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변화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서도 한반도 정세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역할 모색이 필요합니다.

한국통일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민간부분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세션 발제

민간부문의 역할과 평화담론 형성

양창석(선양하나재단 한국대표)

한국통일협회 학술행사
(21.11.4)

민간부문의 역할
및
평화담론 형성

CONTENTS

1. 민간 부문 역할의 이론적 토대
2. 민간 부문 남북교류 배경
3. 민간 부문 남북교류 현황
4. 민간 부문 대북인도적 지원
< 민간단체 사례 >
5. 민간 부문의 역할
6. 민간 부문 역할의 평가와 과제

1. 민간 부문 역할의 이론적 토대

- 현실주의: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규정
 - 자유주의/다원주의:
 -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아님.
 - 국제기구, NGO, 다국적기업, 개인 등 비국가행위자 존재
 -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사회·집단에 영향을 주는 사회, 복지, 경제 문제와 환경 등을 중요시
 - 상호의존론:
 - 국가간에는 다중 채널(정부외에 비정부기구, 엘리트)로 연결
- ⇒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 변화를 통해 민간부문이 국가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

2. 민간 부문 남북교류 배경

- 남북교회의 교류증진을 위한 포괄적 통일정책을 담은 '도잔소 보고서' 발표(84년 세계교회협의회 주최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협의회')
- 86.9월 '제1차 글리온회의(스위스)'에 남북 개신교 대표가 참석, 첫 종교인 만남
- 한국기독교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2)
 - 통일5원칙 채택: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 인도주의, 통일논의에 국민참여
- 카톨릭 북한선교부 설치(85), 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연)
 - 천도교는 네팔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91)에서 남북대표 회동, 뉴욕에서 서울대교구 민화위가 남북천주교인 교류 시작(95)
 - 불교는 LA '남북불교대표자회의' 개최(91.10-11)
- 북한 소식 프로그램 신설, '남북기자교류특별위원회' 구성(90.6)
- 89년 KBS '남북의창', MBC '통일전망대', CBS '통일로 가는길'

2. 민간 부문 남북교류 배경

- 88년 7.7선언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의 정책전환
 -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 동포간 상호 교류를 적극추진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89.6)에 따라 개별 방북 승인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통해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뒷받침
- 1990년 이후, 역사,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체육, 언론, 출판, 관광 등 분야별로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 본격화
 - 서울·평양 '통일음악회' (90. 10/12)
 - 남북통일축구대회(90.10), 세계탁구선수권대회/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91)
 - 한기총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90), '사랑의 의약품 나누기운동'(91), '북한교회재건위원회'(95)
 -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발족(93.4), 식량·의약품·의류 지원

2. 민간 부문 남북교류 배경

- 제3국에서 남북종교인 교류위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결성(93.7)
 -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회의'(96, 베이징), 남북종교인평화모임(97~) 개최
- 95~97년 북한의 자연재해로 대규모 아사자 발생(고난의 행군)
 - 북한은 유엔에 공식 긴급구호 요청(95.8)
 - 96년 정부차원에서 국제기구 통한 식량지원
 - 민간단체들이 대한적십자창구 및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지원활동 전개
 - 6대 종단과 시민단체들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발족,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캠페인(96.6), 감자와옥수수 지원
 - *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조직, '북녘형제와 국수 나누기운동'(96.8)
 - * 불교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 대북 지원(97.5)
 -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 모금 캠페인(97.4)
-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99.2)로 민간부문의 대북 지원이 활성화
-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99.10), 남북협력기금 지원(00년 개시) 및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등 제도화

2. 민간 부문 남북교류 배경

- 민간단체들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구성(01.2), 정보교환 및 사업 운영 관련 협력 강화
- 북민협 중심 민간단체와 통일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발족(05.10)
 - 05년 모자보건, 축산 개발 등 5개분야 민관합동사업 추진
 - 06년 북한 수해 긴급 지원(정부쌀 10만톤 등) 협의
- 노무현 정부 이후 분야별로 인도지원이 전문화, 규모 증대
 -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 모색(05년 북한은 긴급지원 거부 및 개발지원 전환 요구)
-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북지원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
 - 10년 천안함 피격이후 취약계층을 제외한 인도적 지원 중단
- 박근혜 정부는 16.1월 4차 북핵실험후 인도적 지원 전면 중단
- 15년부터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 추진
 - 정부수집 및 관리,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통계자료 분석, 역량강화 지원
- 19,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을 개정,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대상에 포함

3. 민간 부문 남북교류 현황

① 남북공동행사

- 민간 부문 대표들이 대규모 '남북공동행사' 개최
 - 01.8월 평양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 개최
 - 01년부터 매년 3.1절, 6.15, 8.15계기 남(서울, 인천, 광주)과 북(평양, 금강산)에서 개최
 - 남북의 각계 대표들이 참석
- 05년 남북공동행사를 주관하는 남. 북. 해외 3자 '6.15공동위원회'가 결성, 공동행사 개최의 공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
 - 05년 평양, 06년 광주, 07년 평양 개최
- 18년 10.4선언 11주년 남북 민관 공동행사(10.4~6, 평양), 민화협 남북공동행사(11.3~4, 금강산)
- 7대 종단, 민화협,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등이 6.15북측위와 해외측위와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19.2, 금강산)

3. 민간 부문 남북교류 현황

② 부문별 교류협력

● 언론·방송교류

- MBC '금강산 다큐멘터리' 제작협의 방북(95), 중앙일보 통일문제연구소 북한문화유적 답사(97~98)
- '00년 8월 김정일 초청으로 언론사 사장단(56명) 방북
- 00.9월 KBS와 조선중앙TV, '백두에서 한라까지' 공동 제작 방송
- '05년 KBS가 조선방송위원회에 주문, 사육신 제작·방영
- 남북교향악단 합동공연('00), 평양노래자랑('03), 윤도현·김연자·이미자·조용필 평양콘서트 등
- 18년 평창올림픽 계기 북한 예술단(137명) 공연(강릉, 서울)
- 18.4월초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186명) 2회(김정은부부 관람)

남한 예술단 공연
(18.4.1 동평양대극장)



3. 민간 부문 남북교류 현황

② 부문별 교류협력

● 스포츠교류

- 분단 이후 처음 '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단일팀 구성·참가 (총2회)
- '00년 제27회 시드니올림픽, '04년 제28회 아테네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 공동입장 지속(총9회)
- 02 부산아시안게임, 03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05/13) 등 남한 개최 대회 및 행사에 북한 참가
- 07년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남측에서 1달간 전지훈련, 태권도시범단과 FIFA 청소년축구팀 방남
- 국제유소년 축구대회(14.11, 연천/15.8월, 평양)에 남북 유소년 팀 참가



U-17 청소년축구단 전지훈련



3. 민간 부문 남북교류 현황

② 부문별 교류협력

- 종교, 학술, 역사 교류
 - 남북전통공연전등 각종 전시회, 평양교예단 서울공연('00)
 -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의 교회의 역할' 국제회의에 남북대표 참석(04)
 - 영통사, 신계사, 봉수교회 등 문화재 복원
 - * 신계사 낙성 기념 남북합동법회 개최('11.10/ '13.10)
 - * 13.11월 '대각국사 열반 다례제 및 영통사 낙성8주년 남북합동법회'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07~)
 - * 18년 공동 발굴한 60여만점 유물자료 중 26만여 점을 디지털화, 평창 올림픽 기간중 평창에서 만월대유물 특별 전시회 개최
 - 기독교 남북공동기도회(11.11, 평양), 천주교 장충성당 건립 25주년 행사(11.11)

봉수교회(평양)



영통사(개성)



4. 민간 부문 대북 인도적지원

- 2019년말 기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단체는 129개
-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활성화
 - 초기 긴급구호에서 점차 개발지원적 사업으로 발전
- 민주화를 추진했던 시민사회단체(CSO)들이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에 참여, 종교단체 등과 연대
 - 지원 단체들은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 실천적 차원에서 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나눔운동 등)
- 지원 활동은 △일반구호 △농축산 △보건의료 △우선복지(장기 지속적 사업) △사회인프라 분야로 대별(대북지원20년백서)
 - 분야별 비중은 우선복지분야 50%(어린이,임산부 지원포함), 일반(긴급)구호 분야 34%, 보건의료 분야(13%), 농축산 분야 2%, 사회인프라 분야 1%(북민협 소속 34개 단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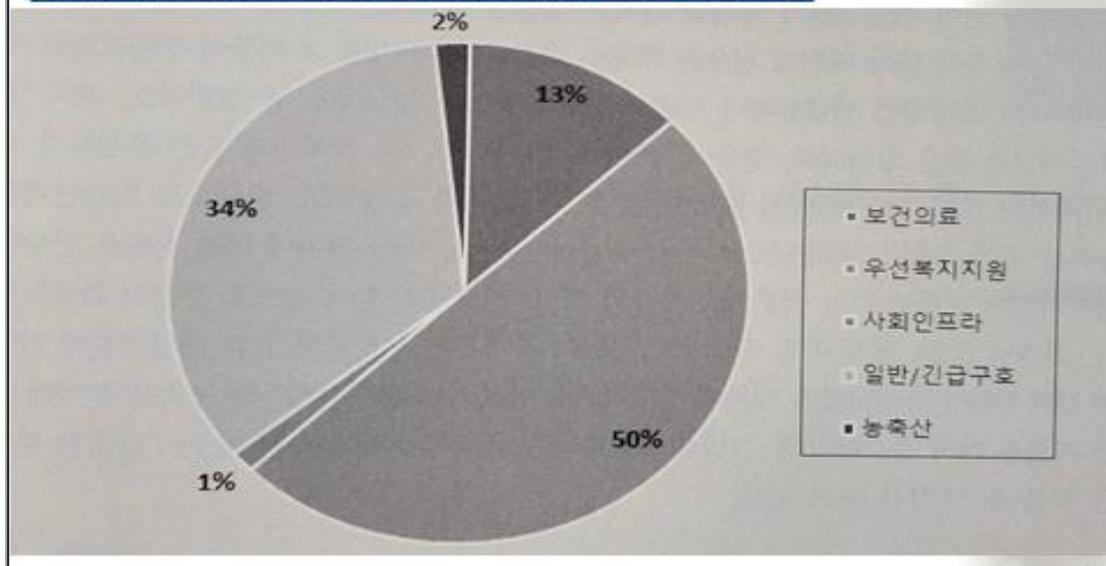
4. 민간 부문 대북 인도적 지원

정부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억원)

구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계
정부 지원	당국차원 (식량차곡 포곡)	1,854	5,366	12,574	183	-	12	19,989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	161	692	300	24	-	1,177
	국제기구 등 통한 지원	264	626	960	503	391	106	2,850
민간	차원	196	2,406	4,609	1,507	252	246	9,216
합계		2,315	8,558	18,834	2,494	667	364	33,232

4.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1995~2015년 대북지원 분야별 비중 (출처:대북지원20년백서)



4. 민간 부문 대북 인도적지원

● 분야별 지원 내용

- 1) 긴급/일반구호 분야: 자연재해에 따른 긴급지원, 흉천역 폭발사고 등 인재에 따른 지원 등 불측정 다수 대상 지원
- 2) 농축산 분야: 개발협력성 지원으로 농자재 지원, 비료지원, 농기계, 시범농장, 농업기술 향상 및 온실사업 지원 등
- 3) 보건의료 분야: 의약품·의료기자재 지원, 병원 건립/개선, 의약품/의료기자재 생산공장 지원.개보수
- 4) 우선복지분야 : 주민대상 장기적, 지속적 사업으로 식량지원, 비식량물품(의복, 난방)지원, 보육시설, 고아원, 어린이 교육지원, 장애인 대상 사업 등
- 5) 사회인프라 분야: 역량강화 및 인프라 개발 사업으로 상하수도 개선사업, 학교건립.개선, 커뮤니티 시설 건립·개선, 산림 녹화 및 환경 관련

4. 민간 부문 대북 인도적지원

● 민관 합동사업

- 2005-7년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민간단체 컨소시엄에 위탁 추진(137.6억원 전액 기금지원)
△나눔인터내셔널 등: 보건의료체계개선사업, △남북나눔운동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등: 강남군 종합복지모델개발사업
- 2014년 민간공모사업으로 모자보건(6.7억), 장애인(10억), 산림·환경(34억) 지원

- ★ 서독은 정치범석방거래(Freikauf), 이산가족재결합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민간단체(신교연합)에 위탁 추진 (34.6억 마르크 전액 정부지원)



봉산군 현덕리 농촌주거개선사업

5. 민간 부문의 역할

① 민간단체의 활동은 인도주의 운동이자 평화운동

- 민간단체 인도적 사업은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정치성과 이념성을 배제
- 인도적 사업은 남북관계의 안전판 역할, 신뢰형성에 기여, 소통 통로 유지 등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
 - 민간부문 사업은 남북 주민간 접촉과 교류 촉진 (접근을 통한 변화)
 - 지속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적대의식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며, 민족 공동체 의식을 제고
 - 상하수도, 산림녹화, 채소온실, 에너지(태양광, 스마트 fam), 보건,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은 남북 경제공동체와 사회공동체 형성에 기여
 - 민간부문 대북협력 사업은 북한의 정책과 제도 변화 유도
- * 북한 당국은 민간단체 교류협력이 북한 체제와 주민에 미칠 부정적 영향 차단 노력(인적교류 제한 및 한글 표시 삭제 등)

5. 민간부문의 역할

② 민간단체의 대북 사업을 통해 국민적 참여 확대 및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

- NGO들의 모금 활동,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 모니터링, 결과 보고 등의 과정을 통해 거버넌스 형성
 - 민간단체는 일반국민, 종교단체, 기업, 대학, 해외동포, 국제기구 등과 연대
- 민간부문 인도적 지원 사업은 민간 통일운동의 합법화와 대중화를 상징
 - 진보와 보수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남북관계에 관심을 갖고 동참
 - 북한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 통일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식
- * 민간단체들이 습득한 정보와 보고서, 접촉 경험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이는 중요한 촉매

5. 민간부문의 역할

③ 민간단체들이 남북관계의 한 축을 담당

- 남북대화 국면이 지속될 때 민간단체 활동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지만, 경색국면에서는 사업이 축소, 연기, 중단 불가피
 - 당국관계 긴장시 민간부문이 소통 채널 역할, 긴장완화에 기여
 - * 04.7월 김일성10주기 조문문제와 베트남 탈북민 입국 등으로 남북 대화 중단시에도 민간교류와 협력사업은 진행, 그 후 당국관계 복원의 마중물 역할 : 6.15공동위 1차준비위('05.3.3-5, 금강산) 개최, 신계사복원사업 계속, 조용필 평양공연 협의('05.3.16) 등
- 민간단체는 남북 정부사이에서 가교 역할
 - 정부 관리의 책임상과 경직성(북한의 행동과 연계)으로부터 자유
 - 남북한 파트너 간의 접촉과 행동이 덜 긴장되고 편한 측면
 - 국민들의 후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력을 뒷받침
 - 정부가 직접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분야 개척(예:합동사업)

6. 민간부문의 역할 평가와 과제

① 민간단체의 교류와 협력은 정경분리 원칙의 한계와 남북 당국의 통제에 의해 제약

-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 이에 따른 민간단체의 자율성·독립성 요구가 충돌
 - 사전 접촉 '허가제' 및 대북지원단체 지정 요건 완화 필요
- 남한 정권의 5년 단임제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민간단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부족

②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부재

- 반대론은 '북한정권 연명, 군부 등 특권층 전용(모니터링 한계), 북한의 도발행동 지속(대북지원이 핵개발에 기여)' 등 제기
 - 특히, 인권 등 북한주민의 시민권과 자유권을 중요시하는 민간단체들은 대북지원에 반대

6. 민간부문의 역할 평가와 과제

- 찬성론은 '생존적 차원의 인권, 민족공동체 형성(동포애, 적대감 해소), 주민의식 및 사회 변화 기대' 등 주장
-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협약 및 법제화 추진 필요
 - * '남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 ③ 정부 - 민간단체 - 국제기구(단체)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국내 민간단체의 열악한 자금사정 및 조직역량 부족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 매칭 지원(행정비) 확대, 인적 역량 강화 및 법률 지원 프로그램
 - * 대북지원에 대한 유엔제재 면제 신청관련 행정 및 법률(자문 변호사 채용 및 법률 자문비 등) 지원
- 독일 및 미국(USAID) 처럼 정부 예산으로 인도적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 확대 방안 모색

6. 민간부문의 역할 평가와 과제

- 국제기구 및 국제NGO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남북관계 악화 시에도 인도적 협력 지속 가능
 - 정보공유 및 역할 분담, 대북협상 레버리지 강화
-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국제포럼 지원 확대
 - 제3국과의 다자적 접근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지원·개발협력 모델
 - 북측도 제3국 개최 개발협력 및 역량강화 포럼 참가에 긍정적
 - * 기후변화, SDGs, 남북공동과제(서해평화적이용, 공유하천, 감염병, 산림 및 생태계 복원 등)도 다자포럼에서 논의
 - 개발협력과 평화구축 간 발전 모형 연구·개발
 - * "There can be no sustainable development without peace and no peace without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의 특징

자료발췌(이로운넷)

‘뉴노멀(New Nomal) 시대.’

이 말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의미하는 말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했다. 지난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의미가 확장됐고 또한 널리 퍼졌다.

뉴노멀 사회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사실 예상치 못한 사태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선진 각국의 신성장 정책 추진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세계 경제는 회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을 떠올리는 심각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시장이 붕괴돼 지속성장 가능성에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상의 변화를 촉발한 팬데믹

봉쇄조치로 1억명이 극도의 궁핍에 내몰렸다. 일자리 급감으로 노동 인구의 거의 절반 수준인 16억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생산 감소→소득 감소→수요 감소’ 악순환이 발생했다. 실물경제가 악화하면서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과 교육 등에 불평등이 심화됐다. 계층 간에 배타주의 현상이 가속화되며 사회적 응집력도 약화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위기에 이미 수년간 대응을 해왔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뿌리를 내리는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표준은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변화의 핵심에는 5G 연결,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및 로봇 솔루션 등 기술혁신이 자리잡고 있다.

특징1 : 재택근무 확대와 탈도시화

뉴노멀의 핵심 키워드로는 ‘언택트(Untact)’, 즉 비대면을 꼽을 수 있다. 기업들은 재택근무가 뉴노멀이 될 것을 확신하며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현장에 꼭 와야 하는 근무자를 제외하고 원격 근무를 통해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무실이라는 공간은 점차 사라지고 회사는 가상으로 존재하게 될 수도 있다.

기업들은 원격업무 확산에 따라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신기술 도입은 물론, 원격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하락 등 다양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직원들의 소속감과 업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징2 : 전자 상거래가 일반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활성화된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제 길거리 상점은 상품 거래처가 아닌 쇼룸과 상품 보관창고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의 매장 방문회수가 줄고 큰 매장에서 다양한 품목을 일괄구매하게 되며 소매상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특징3 : 미니멀 라이프 추세 강화

전문가들은 일상이 단순화되고 사람들의 만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와 집 등은 소유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하고, 온라인 강의, 온라인 종교 활동 등이 많아지며 커피숍과 대중목욕탕 등 집객형 서비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징4 : 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

코로나19로 건강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의 운동, 여가생활 등이 강조되며, 건강 및 웰빙이 관심사가 되면서 관련한 정책도 대중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 케어 및 원격 상담 체재 구축함, 아울러 의사와 연중무휴 24 시간 디지털 액세스 등의 서비스가 필요해질 전망이다. 또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음식과 유기농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징5 : 세계화 퇴조와 지역주의 강화

신자유주의는 퇴조하고 국가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되고 중상위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항공사는 국유화되며 제조업이 해외에서 본국으로 들어오는 ‘리쇼어링(reshoring)’ 움직임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징6 :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 증대

사회적 기업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위험에 처한 소외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해결해왔다. 사회적 기업가는 불평등과 시장 실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변혁의 길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M E M O

M E M O

M E M O